

2008年度 人才開發院 綜合監査 結果 處分要求書

1. 처분요구서 일람표 (8건)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요원 운용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수요원 운용계획 수립·시행 ⇒ 교수요원 보직관리 개선 ⇒ 연구업무수당 지급 주의 	교학과	주의 (권고)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관리 개선방안 마련·시행 ⇒ 교육생 수칙 지침 개정·시행 	교학과	개선 (권고)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인천광역시 사이버센터 고도화사업 추진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지급요령 준수 및 사업비 산출 근거 검토·확인 	교학과	주의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콘텐츠 확대 및 학사관리시스템 보완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계약 공고시 평가기준 등 공고 및 선금정산 철저 	서무과 교학과	주의		1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60천원 징수 	서무과	시정		1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개발원 자치법규 운용에 관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지침을 훈령 등으로 규범화 	교학과	권고		2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허가 투명성 확보 ⇒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강구 및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 	서무과	권고		2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수 	서무과	주의		29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교학과

[행정상 조치] 주의(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교수요원 운용 부적정

○ 교수 및 교과목 지정 현황

2006.5.9. ~	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수석교수)	000 (5급)	000 (5급)	000 (6급)	000	000
	교과목		-주요시책 -예산실무 -노인복지 -구세, 시세 -세외수입증대방안 -채납세우수사례발표	-민원실무 -사무관리 -지방자치제도	-공사행정실무 -도시행정론 -도로공학 -토질역학	-기획실무 -조직실무	(06.6.13~06.6.12 항만공사 파견)	(06.5.1~07.5.1 . 행자부 파견)
2006.8.9. ~	비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교학과장)	000 (운영팀장)	000 (사이버교육팀장)	000 (관리팀장)	000 (운영팀)	
	교과목		-인사운영 기본계획	-지방자치제도	-엑셀정보화	-행정학의 이해	-지방공무원제도	
2006.8.9. ~	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수석교수)	000 (5급)	000 (5급)	000 (6급)	000 (5급)	
	교과목		-프리젠테이션	-사무관리 -지방자치제도	-기획실무 -조직실무	-민원실무 -회계실무		
2007.2.26	비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교학과장)	000 (운영팀장)	000 (사이버교육팀장)	000 (관리팀장)	000 (운영팀)	
	교과목		-교육훈련제도	-예산실무	-엑셀정보화	-행정학	-지방공무원제도	
2007.6.5. ~	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수석교수)	000 (5급)	000 (5급)	000 (5급)	000 (5급)	
	교과목		-민원실무	-행정학 -지방자치제도	-회계실무(계약) -예산실무	건설공사 감독실무 사무관리	기획실무 회계실무(지출)	

2007.8.14 ~	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수석교수 직무대리)					
	교과목		민원실무					
2007.9.6. ~	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수석교수)	000 (5급)	000 (5급)	000 (5급)	000 (6급)	
	교과목		-민원실무	-행정학 -지방자치제도	-회계실무(계약) -예산실무	-기획실무 -회계실무(지출)	-건설공사 감독 실무 -사무관리	
2008.1.19. ~	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수석교수)	000 (5급)	000 (5급)	000 (5급)	000 (6급)	
	교과목		-국제회의 행정영어 -지식사회의 과제	-행정학 -지방자치제도 /조직학/정책학	-예산실무 -회계실무(계약) -지방세 총칙	-기획실무 -회계실무(지출)	-사무관리 -공사행정실무	
2008.3.4. ~	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수석교수)	000 (5급)	000 (5급)	000 (6급)	000 (6급)	
	교과목		-국제회의 행정영어 -지식사회의 과제	-기획실무 -정책학	-민원실무 -민법분야	-예산실무 -지방세 분야	-사무관리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신고 실무	
2008.3.4. ~	비전임 교수	성 명 [직위(급)]	000 (총무팀장)	000 (기획팀장)	000 (운영팀장)	000 (사이버팀장)		
	교과목		-지방자치제도	-행정학 전반 -조직학	-회계실무 -보고서 작성방법	-정보보호		

○ 교수요원 임용 및 근무지정 현황

직급	성명	임용		근무지정		비고
		일자	임용사항	일자	보직	
행정5급	000	2007.01.16	교수요원	2008.02.18	교학과 기획팀장	
행정5급	000	2007.05.31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2007.06.05	교수요원	

○ 2006~2008년도 연구업무수당 지급내역

연번	직급	성명	재직기간	2006		2007		2008.6		비고
				강의 시간	수당 지급	강의 시간	수당 지급	강의 시간	수당 지급	
1	행정5급	000	05. 5 ~ 07. 1	22	5 ~ 12		1			
2	행정6급	000	05. 8 ~ 06. 7	8	5 ~ 7					
3	행정5급	000	05.11 ~ 07. 1	29	8 ~ 12		1			
4	시설5급	000	05.11 ~ 06. 7	8	5 ~ 7					

5	지방4급	000	06. 7~06.12	2	8~12					
6	행정6급	000	06. 7~07. 1	-	8~12		1			
7	행정5급	000	06. 7~07. 5	3	8~12	9	1~ 5			
8	행정5급	000	06.12~07. 8			6	1~ 7			
9	행정5급	000	07. 1~08. 2			70	2~12		1	
10	행정5급	000	07. 1~08. 2		5~12	54	1~12		1~ 6	'08.2.16 기획담당
11	시설5급	000	07. 2~07. 8			5	3~ 8			
12	행정5급	000	07. 5~현 재			2	6~12	10	1~ 6	
13	행정4급	000	07. 8~07.12				8~12			
14	시설6급	000	07. 8~08. 2							
15	행정4급	000	07.12~현 재					12	1~ 6	
16	행정5급	000	08. 2~현 재					2		
17	세무6급	000	08. 2~현 재							
18	지적6급	000	08. 2~현 재							
19	행정5급	000	03. 9~06. 5	8	5~ 6					'06.5.1 행자부파견
20	행정6급	000	04.10~06. 8	2	5~ 8					비전임
21	행정5급	000	05. 2~06. 7		5~ 7					비전임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인재개발원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요원은 교육원에서의 강의·연구 및 교육운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 인력임에도 교수요원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 교수요원 운용계획 미수립 및 담당과목 지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연구 및 교육운업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원에서는 교수요원을 운용함에 있어 교수요원 자격기준에 맞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수요원 인력운용 방안·담당 교과목별 교수편람 제작·연구활동 등의 년차별 목표 설정 등 중장기 교수요원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수요원이 담당할 교과목은 사전계획에 의거 교수기법 및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교수요원을 운용함에 있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담당할 분야에 맞는 교수요원을 보직하지 아니하고 교수요원에 맞춰 담당과목을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정책학 및 회계실무 등의 과목은 전담 교수요원이 있음에도 외부강사로 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교수요원 근무지정 등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강의·연구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요원의 보직관리는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에 해당되고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를 자체 근무지정에 의거 보직 변경하였고, 교수요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를 교수요원으로 보직하였으며,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19명의 교수요원 보직기간이 평균 9개월에 그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연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며, 연구업무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그 지급범위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교육계획 및 지정교과목 등을 감안하여 교수요원으로 발령받은 자 중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연간 강의시간이 20시간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업무수당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소속 직원 중 비전임 교수로 지정(원 자체지정) 받아 강의를 실시하였다 하여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 교수요원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2. 교수요원의 보직관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3. 연구업무수당은 교수요원으로 발령받은 자 중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교학과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교육생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계획) 현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65개 과정 244회 7,700명	56개 과정 120회 5,760명	49개 과정 109회 4,055명

[위법부당내용]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수칙 지침 부적정

교육생 수칙 지침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 외출, 외박 등을 할 경우 별지서식에 의거 허가 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6조에서는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교 조치할 수 있다. 1. 신병 또는 교육생의 특수사정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진단서 및 관계증명서 첨부) 2. 별표1의 1급사고에 해당될 때’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1조에서는 ‘① 교육생이 기본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교육효과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퇴교 또는 별표2의 감점기준표에 의하여 근태점수를 감점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고의 종류는 1급사고와 2급사고로 구분하고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다음 각호로 의한 경우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결강, 외박, 외출, 조퇴 등을 할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단, 별표1의 1급사고 제5호 아래 결석 허가일수는 초과할 수 없다.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공가, 특별휴가로 인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관계증명서 첨부)

④ 근태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교육과정별 근태배점은 교육훈련평가계획에 의한다.’고 정하면서, [별표1]에서는 1급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의 종류를 ‘1. 무단(결석, 결강, 조퇴, 외출, 외박)행위 2. 원내에서의 음주, 도박, 절도행위 3. 교육원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분실한 경우 (변상조치 병행) 4. 근태누적 감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5. 아래 결석 허가일수를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2급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의 종류를 ‘1. 허가에 의한 결석, 결강, 외출, 외박, 조퇴 행위 2. 교육원 비품 및 시설을 부주의한 과실로 파손, 분실한 경우 (변상조치 병행) 3.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위반 행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수칙 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지침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결석·외출·외박 등의 허가 신청을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공가·특별휴가로 인한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결강·외박·외출·조퇴 등 할 수 있다고 허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근태관리에 있어 감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별표1]에서는 허가의 의한 결석·결강·외출·외박·조퇴 행위도 2급 사고로 분류하여 감점조치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6조에서는 [별표1]의 1급사고에 해당될 때는 퇴교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정하면서도 같은 지침 제22조제1항에서는 ‘1급사고는 퇴교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하여 규정하면서 강행 규정화 하는 등 상위규범을 위반하거나 지침 자체에서도 상호 모순되거나 중복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원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수칙 지침」을 운용하면서, 상위규범 위반 및 내용상의 모순, 운용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를 개정·시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교육생 복무관리 부적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수칙 지침」에서는 교육생이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 실적(계획)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49개 과정을 109회 운영하여 4,055명 교육하였고, 2007년도에는 56개 과정을 120회 운영하여 5,760명 교육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65개 과정을 244회 운영하여 7,700명 교육하는 등 연간 교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지속적 증가와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복무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교육생에 대한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교육운영 담당 직원과 복무담당 직원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교육생의 출결 현황을 출석부에 의해 과정별 1일 1회씩 호명에 의해 확인하고 있으며, 결석·결강·외출·외박·조퇴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등 교육생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시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수칙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2. 교육생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예. 교육생증 IC카드화 등) 등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사기관명] 인재개발원 교학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2008 인천광역시 사이버센터 고도화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2008. 1. 1 상시학습 체제의 도입 및 교육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른 학사관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고 학사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인사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무원 학사업무의 자동화 처리를 위하여 사이버 교육센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 10. 22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받아 추진하면서 위 사업계획을 총사업비 694,262천 원의 예산으로 서버추가 도입(360,610) 학사관리 시스템 보강(93,652) 직무과정 콘텐츠 개발(140,000) 각종 콘텐츠 임차(100,000)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인천광역시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인천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서버도입, 콘텐츠 개발, 시스템 보강, 직무과정 콘텐츠 개발, 콘텐츠 임차에 관련된 사업비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또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정하였습니다.

○ 2008. 2.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입찰공고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통하여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고 2008. 3. 28. (주) 디유넷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용역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세부산출 내역서를 산출하였으나 ① 교육운영 시스템(84,771천원)의 경우 투입인력 및 투입기간의 구체적인 내역을 첨부하여 적정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없이 산출하였으며, ② 콘텐츠 개발분야(50,983천원)의 인력투입 일정 및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③ 콘텐츠 임차(90,000천원)의 경우 일부 관련업체의 견적을 참고하였으나 각 과목별 난이도, 활용도, 사용기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임차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 2008. 3. 28 ○○ ○○○○ ○○○ 0가 000 (주) ○○○ ○○○환과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면서 용역계약서 제5조(용역비의 지급방법)에서 선금 지급조건을 40%로 명시하여 2008. 4. 18 선금 131,86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금 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여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선금 지급비율은 100분의 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용역의 경우 신기술을 요하는 용역이 아닌 통상 운영되는 사이버 교육센터 고도화 사업임에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선금 지급시 선금지급 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라며, 각종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구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서무과·교학과**[행정상 조치]** 주의**[재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제 목] 어학콘텐츠 확대 및 학사관리시스템 보완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07.3.30 ~ 5.28(2개월)
- 발주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입찰결과 (주)○○○과 ○○○○○○○○○(주), 2개 업체만 참여
- 계약업체 : (주)○○○
- 계약금액 : 87,951천원
- 과업내용 : 어학콘텐츠 확대(25개), 학사관리시스템 보완(평가기능 등)

[위법부당내용]

1.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공고문에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공고하지 않고,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를 함에 있어 산출근거도 첨부하지도 않고 방침을 받는 등 업무처리 부적절

※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령, 행안부 훈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위 법령 및 훈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평가하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항목별로 합리적·구체적 기준을 제시·산출하는 한편,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한 후 최고점수를 득한 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앞서 입찰공고 시에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소(항목) 및 평가방법(배점 등)”을 함께 공고하여 입찰참가 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07년 3월 “어학콘텐츠 확대 및 학사관리시스템 보완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 공고 시에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시켰는바,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 참여업체로 하여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포함, 공고함이 요구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사업제안서 설명 시에 배부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교육원에서는 당해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기술능력 평가 80점(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평가로 세분), 입찰가격 평가 20점 등으로 배분하였는바, 당시 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면서 2005년도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 총자본회전율 등)를 근거로 산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연필로 임의로 작성·산출하고(* 개인 서류로 편철), 산출근거는 첨부하지 않은 채로 “기술능력평가표”만 첨부하여 최종방침을 받는 등 평가과정에 있어 일부 부적정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2.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아울러 회계예규(2200.04-131-9 ; 선금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하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지급된 선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성금 지급시마다 선금지급 정산액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원에서는 2007.4.17. 위 용역에 대한 선금(* 계약금액의 50%)을 지급하였고, 용역 수행업체에서는 선금을 전액 사용하였으나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각종 용역발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입찰 공고 시에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 입찰참여 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각종 평가와 관련 위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고 관련자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향후 각종 용역 발주 시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예규에 따라 선금 정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서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징수 3,260,006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

○ 현황

구분	사용료 산정액 (조례에 의거) (A)	사용료 징수액 (B=A-C)	부가가치세 공 제 액 (C)	부가가치세 신 고 액 (D=C-E0)	부가가치세 보 관 액 (E)
곽훈석 외 77	37,850,000	34,589,994	3,260,006	2,388,177	871,829

[위법부당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2007.1.1 시행)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었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부동산 임대업) 및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시 본청 회계과에서는 2006.12.29(회계과-16335)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을 통보하면서 2007.1.1부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및 기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에서는 2007년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 곽훈석외 77건에 대한 시설사용료 37,850천원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3,260천원)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34,589천원)을 사용료수입으로 세입처리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로 공제한 3,260천원 중 2,388천원은 서인천세무서에 신고 하였으며, 871천원은 2008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예정 금액으로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 예규(재경부부가-306,2007.4.25)에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의 테니스장, 잔디구장, 숙소 등의 시설사용료의 경우도 위 예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인의 경우에는 주말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장기간 객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동 예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주)○○○○○○○○○○을 제외한 다른 이용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어 환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에서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3,260천원의 사용료를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주)○○○○○○○○○○을 제외한 77명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됨에도 서인천세무서에 신고납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사용료 1,678,168원(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세 별도 징수요함)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2008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예정금액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871,829원은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착오 신고한 710,009원은 서인천

세무서로부터 환부 받은 후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교학과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재개발원 자치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길라잡이(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2005)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조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지지만(주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것) 행정 규칙적 성격을 가지는(예, 공무원복무조례 등) 것도 있으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정립하는 것이고,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

규칙의 일종이며, 예규는 규칙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인재개발원 관련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운영 내부지침

명 칭	제정일	폐지일	비 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	1985. 9.16	2006. 9. 4.	내부지침으로 운영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학생수칙규정	1985. 9.16	2006. 9.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생활지도교수요원근무규정	1985. 9.16	2006. 9.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분임도의운영및지도규정	1985. 9.16	2006. 9.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도서관리규정	1985. 9.16	2006. 9.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을 운용하면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2006.7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전문교육과정 일원화 및 교육과정 전면 이수제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학칙 규칙을 법령개정 및 현재 교육운영에 맞는 학칙규칙으로 개정하고 규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 제19조(위임규정) 규정에 의거 기존 훈령을 폐지하고 내부지침으로 수립·운영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득하여 훈령으로 운영되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학생수칙 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생활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분임도의 운영 및 지도규정”, “인천광역시 도서관리 규정”등 5개 훈령을 폐지하고 교육원 내부지침으로 수립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훈령을 폐지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는 5개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훈령이 아닌 내부지침으로 운용하는 것은 법체계를 지나치게 하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 근무수칙 및 교육운영을 규약하는 사항으로 기관내부의 업무방침을 정하기 보다는 훈령으로 운용되어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친 후 공포의 절차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교육생들에게 널리 알린 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훈령으로 운용되던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하향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는 5개의 규정은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상시 학습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동 내용은 사이버교육 운영에 따른 학사관리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 규정과 동일하게 훈령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나,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상시학습 업무처리 지침(총무과 교육훈련팀)”의 제정에 따른 상충 및 간섭 여부로 인해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은 “상시학습 업무처리 지침”과 연계하여 공무원 상시학습에 따른 사이버교육 부분에 대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상시학습 업무처리 지침”이 여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연계 및 시행 초기의 오류 보완을 위하여 예규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에 있고 향후 제도정착 후에 예규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바 인재개발원에서는 “상시학습 업무처리 지침”의 예규제정과 연계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도 예규로서 제정하여 상시학습에 따른 사이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인천사이버교육센터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운영 현황

(2008.6월말 현재)

분 야	과목	과정	수강인원	비 고
외국어	3과목	25과정	19,517명	
컴퓨터	4과목	42과정	10,825명	
교 양	5과목	27과정	4,611명	
행정실무	3과목	41과정	4,047명	
공인중개사	2과목	12과정	9,579명	
모의테스트	1과목	3과정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에게나’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대시민 대상으로 확대 서비스하기 위해 2005.10월부터 “시민사이버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어학 및 지식강좌 22개 과정을 시작으로 감사일 현재 외국어, 교양, 행정실무, 정보화, 공인중개사 등의 150 과정으로 확대하여 2008년 6월 현재 53천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48천여명이 교육을 청취하고 있어 다수의 시민이 본 사이버교육센터를 이용하여 전문 및 소양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인천사이버교육센터”는 인재개발원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이버교육 기관으로 그 수혜의 대상이 일반시민으로 하고 있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교육과목·방법 및 수료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인재개발원에서는 시민사이버교육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사이버 교육과 교육내용이 합쳐진 “사이버교육 기본운영 계획”을 통해 시민사이버 교육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교육목적(대상) 및 방법이 별개인 공무원과 시민 교육을 하나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시민사이버교육에 대한 전

반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규정(조례 등)을 제정하여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내부방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학생수칙 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생활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규정”, “인천광역시 도서관리 규정”등 5개 규정은 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 근무수칙 및 교육운업을 규약하는 사항으로 본래 운영되던 대로 훈령(예규)으로써 운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상시학습에 따른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도 “상시학습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연계하여 훈령(예규)으로써 운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천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사이버교육 기본운영 계획”에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후 기본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서무과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교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교육시설 및 사용료 부과 기준

(단위:천원)

구분	생활관(인/1실)			강당		강의실			어학실	잔디구장	테니스장 (인)	체육관
	1인	2인	34인	500석	300석	150석	100석	50석	30석			
4시간				50	40	40	30	20	20	70	4	40
1일	60	40	10							150		100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인재개발원 시설(생활관,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7조에서 정한 별표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시기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이전에 납부하여야 하고, 제8조에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부 감면하고,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는 50%를 감면하며,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9조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시설사용허가 운영 미흡

사용허가 시설 중 체육시설(잔디구장, 테니스장)은 주로 일반시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 제공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바, 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시설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설 사용허가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방법을 선착순에 의한 방법을 취하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사용허가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니스장의 경우는 일자별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기간별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하여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연중 계속하여 특정단체가 이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시설사용료 부과 부적정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하여 함에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테니스장을 사용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사용허가 단체에게 “테니스장의 관리”의 조건을 달아 매월 100천원을 정액으로 부당하게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고,

2008.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워크숍개최를 위해 양지관 등을 사용허가 신청하였다면 이는 위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일 것임에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2008. 4월 창의력개발과정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참여 강사에게 양지관을 사용허가 하였다면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관(양지관)은 신규채용자과정 등 교육훈련 과정에서 합숙

교육이 포함될 경우 교육생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물임에도 합숙교육 외의 기간에 사용요청하여 이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는 반면,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행사 시에 여타 교육원 시설의 사용없이 단순히 양지관의 이용만을 사용협조 할 경우 이를 위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바,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용료 반환 규정 불합리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서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되 각호에 의한 반환사유 중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소기간에 따라 전액반환 또는 일부공제 없이 무조건 일부공제를 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관련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경우 공개적으로 실제 사용일에 한하여 허가함으로써 그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료가 부과납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시설물 본연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하시고, 과도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 반환규정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재개발원 서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 축·부의금 집행내역

(단위:건/천원)

구 분	2007		2008.6.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6	1,210	14	700	
소속직원	6	360	2	100	
시 의 회	5	150	3	150	
유관기관			1	50	
언 론 사	4	160	3	150	
기 타	11	540	5	250	

[위법부당내용]

- 2006.5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2008.3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결혼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되,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

소,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사적인 집행을 금하고 소속직원 또는 직무관련 기관(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기준에 위배되게 업무와 관계가 없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단체·언론사 직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2007년도 15회 700천원, 2008년도 8회 400천원 등 총 23회 1,1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